민주 광주시장 경선 배심원제 도입 혼미

통합과 혁신위 "시민은 찬성하는데 후보는 반대"

지역 국회의원들 "광주시민 역량 폄하하는 것"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과 관련, 광주 국회의원들이 유보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이 "광주 민심과 동 떨어진 것 생각"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최재성 의원은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유보적인 광주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 훨씬 넘는 광주 시민들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광주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광주 국회의원들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반대 의견을 중앙당에 제시하는 것과 관련, "민심과 당심이 합치되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취합해야 하지만 각종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여론을 청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중앙당 차원에서 현명하게 이견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기존의 광역단체장 경선은 민심과 당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후보 진영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반면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이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강조,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광역단체장 경선에서의 국민경선 방법과 관련, 인터넷 투표와 모바일 투표, 시민 투표, 여론조사(인터넷 투표시 연령 편중 보정)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국민경선 방법을 통합과 혁신위에서 확정했으며 조만간 당무위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재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반대하는 광주 국회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광주지역 모 의원은 "광주시민 100명과 외지인 100명이 광주시장을 선출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실체를 광주시민이 알게 된다면 지지율은 절반 이하로 수직 낙하할 것"이라며 "특히, 동원 및 매수를 통한 표심의 왜곡을 막기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광주시민의 역량을 폄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일부 강경파들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밀어 붙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 지도부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며 "이는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들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로 열린 제2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국회의원·기업 부문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수상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강운태· 김성곤· 김재균· 박주선· 이낙연의원 등이다. /연합뉴스

"대국민 사기극" "국가 중대사"

대정부 질문 세종시 수정안 놓고 격론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세종시 수정 찬반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간, 여당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에 팽팽한 논리대결이 펼쳐졌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월 고시한 세종시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자족시설 용지가 전체의 11.5%나 됨에도 총리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족용지 6.7%'로 축소 조작, 세종시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 세종시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21일째 단식 중인 민주당 양승조 의원까지 나서 "이미 과천에 7개 부처가 있고 계룡대에 3군 사령부가 있는데 나라가 거덜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며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총대 총리'"라고 몰아붙였다.

자유선진당에서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정권의 제2의 대국민 사기극의 대본"이라며 "원안 백지화의 근거로 제시된 국정 비효율 및 자족성 관련 자료는 허위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 당위성을 적극 거들었다.

백성운 의원은 "세종시 문제가 장기 표류할 경우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처를 돌릴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상은 의원은 "역사적으로 보면 3당 합당이나, DJP 연합, 행정수도이전 등은 모두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집권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정치적 노림수였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세종시, 원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이 확보되면 대통령과 총리의 행정 각부 통제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화상회의 시스템의 현황, 위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는 위헌 가능성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함평 도의원 2개 선거구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고 여성 공천 규정을 보완하는 등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일부 관련법의 정비를 마무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개정안을 넘겼다.

정개특위는 이날 지난해 의결한 광역의원 선거구를 다시 조정, 당시 1명으로 줄어들었던 함평군 광역의원 정수를 2명으로 다시 늘렸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당초 46명에서 지난해 50명으로 늘었다가 이번에 또 다시 51명으로 증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선거 핫 코너

정동채 예비후보 "기무사터 활용해야"

정동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4일 5년째 폐허로 방치되고 있는 5·18 사적지 26호인 쌍촌동 옛 기무사 터를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가 5·18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직도 5·18 사적지인 기무부대 터가 폐허로 방치된데 안타깝다"면서 "조속히 국방부와 협의해 민주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5·18 항쟁 지도부를 감금·고문했던 역사의 현장을 민주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청소년 체험캠프와 역사관광공원으로 조성해 주변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오 위원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

김종오 김대중 평화센터 위원은 4일 "대기업 활동 경험과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광산구를 기업·환경도시로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겠다"며 광산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SK그룹 상무 출신인 김위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디테일 한 시민주권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형근 원장 북구청장 출마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와 혁신으로 살 맛나는 경제 북구를 만들 것"이라며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중앙당 보건의료특위 부위원장인 그는 ▲복지공동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시민교육 강화 ▲비엔날레 특구사업 ▲광주호 일원 문화 관광단지 조성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